

“남·서구 수돗물 이물질은 노후관·공사 진동 탓”

광주시 사과...20년 이상 노후관 800km 유사 사고 반복 우려
2호선 공사때 남광주역~백운광장 60억원 들여 수도관 교체

최근 광주 남구·서구 일부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온 수돗물 사고의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과 그 주변에서 진행된 공사 진동이 맞물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광주시 상수도본부 밝혔다.
노후 상수도관 내부 코팅물질이 주변 공사 진동으로 떨어져나와 수도관을 타고 가정과 학교, 식당 등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과 노후 상수도관이 겹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 같은 수돗물 이물질 사고 반복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11일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부 조사 결과 이번 수돗물 이물질 사고는 노후 상수도관과 주변 공사 진동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봉주 상수도본부장은 “현재 보다 면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면서 “(유역한 원인이 공사 진동)이므로 도시철도 2호선 지하 공사 구간과 상수도관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공사 진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3970km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800km)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상수도관의 크기는 가장 작은 지름 13mm부터 최대 1800mm까지 다양하다.
황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거듭 사과를 드린다. 다만, 광주시 분석 결과 해당 수돗물 탁도(탁한 정도)가 한때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유사 시 즉시 시민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향후 조치 계획으로 이번 수돗물 이물질 사태를 유발한 노후 상수도관(백운광장 주변 3km 구간)을 조기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시철

도 2호선 1단계 남광주역~백운광장 구간 공사가 이뤄질때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8시40분부터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 가정집, 학교, 식당 등에서 기름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상수도본부 조사 결과, 백운광장 상수도관(지름 900mm) 내부 코팅막이 벗겨져 관을 타고 국제양궁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본부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 주변에서 50kg짜리 포대 3포대 분량의 이물질(코팅막 가루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일·생활 균형 지원기관 보고서’ 전남여성가족재단 발간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11일 ‘전남 일·생활 균형 현황과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일·생활 균형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자녀가 있는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어 전남의 인구·사회·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전남형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전남형 일·생활 균형 정책은 ‘성평등한 삶의 질 실현을 위한 보편 사회정책’의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으로 전남도민의 자유롭게 평등한 삶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 영역과 4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빛고을행복니눔 가래떡데이 1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소담떡방 앞 사거리에서 열린 제6회 빛고을행복니눔 가래떡데이를 맞아 주민과 학생이 가래떡을 만들고 있다. 이날 주민 등이 만든 300m 길이의 가래떡은 홀로사는 어르신과 경로당에 전달됐다. /최원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보문고 몰카사건’ 처리 미흡

이경호 시의원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에 대한 고민 없어”
김나운 시의원 “2016년 이후 성비위 교원징계 31명 달해”

광주시 광산구 보문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몰카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여전히 함께 학교에 다니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학내 불법 촬영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조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교원은 총 2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2) 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 몰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학

교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초등학교 1건, 2018년 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 2019년 고등학교 2건 등 총 7건의 학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과 학생인 경우가 많았고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촬영하거나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특별교육, 서면사과, 보호자 특별교육이 대부분이었고 전학조치는 2건에 그쳤다.
실제, 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보문고 사안접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보문고에서 발생한 학내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뒤 현재까지 피해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당시, 가해학생은 이동수업 중 본인의 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를 미리 설치해 둔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피해학생에게 적발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피해학생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가해학생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저지른

행위였다고 진술했다”며 전학 조치가 아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계속 한 학교에 다니게 됐다.
또 김나운(민주·북구6) 의원은 이날 “교육청의 성인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성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지역 학교의 성비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성비위와 음주, 실정법위반 등은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31명, 음주운전 관련 63명 등 총 23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3명으로 전체 대비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 전·후방산업 유치해야”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제로페이 활성화 필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1일 전남도의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김기태(순천1·민주) 의원은 이날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통계’ 자료를 인용, 전남의 경우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이 연간 1593만원으로 전국평균(1844만 원)을 밑돌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전국평균(1620만 원)에 못 미치는 1411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평균 2만3000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제로페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용(광양 3·민주) 의원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간접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인구 수나 복지여건이 비슷한 지역임에도, 연간 지원건수(13,672건) 대비 신안군은 6.4%(876건), 구례군 5.1%(699건)인 반면,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은 1%(146명)에 불과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본사나 단독업체 비중이 작고 공장이나 사업체 입지 비중이 커 지역 소득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 유치를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원(담양1·민주) 의원은 경제에너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업의 확산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가맹점 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지만 결제 금액은 가맹

지역사회복지사업도 영암군의 경우 15개 사업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한 반면, 곡성군은 8개 사업에 4억900만원만 지원하는데 그쳤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목포(91명·3억7500만원 지원), 무안(6명·2400만원) 등으로 사·군별 격차가 커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마켓 공략

400여 제품 쇼핑몰 입점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해 인터넷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벼룩시장(플리마켓)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픈마켓은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네이버스토어 등으로,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한 400여 제품이 주요 쇼핑몰에 입점을 완료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목표 품목을 선정해 제품 광고, 할인 이벤트 등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플리마켓은 자유롭게 물건의 매매·교환이 이뤄지는 시장이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단위로 열리는 오프라인 장터다.
전남도는 올해 플리마켓 일정과 기업의 참가 수요를 파악해 기업에 셀러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 실시하는 만큼 참가 기업의 홍보 효과와 매출 등 수익성을 분석해 2020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희필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업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2020년에는 판로 관련 예산을 확대, 폭넓은 판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 10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196개, 마을기업 245개, 협동조합 792개, 자활기업 82개 등 131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실현하며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제품의 농협 입점 추진, 품평회·상담회 개최, 전문가 초청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아웃렛 등 대형유통망 연계 판촉행사 개최 등 다각적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